

## The Reunified Korea Economy

# 統一經濟

## Briefs

● 2006년도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관계 전망

## Executive Summary

### □ 2006년도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관계 전망

2006년도 한반도 및 남북 관계는 북미간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불안과 안정이 교차되는 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위조지폐·인권 문제 등 '3 악재'로 인해 최소한 금년 상반기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을 비롯한 어떤 국가도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4분기 이후부터는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안정된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전개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 지원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대외 개방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정세는 김정일 정권이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난 회복이 지속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군정치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상교양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유도하려 할 것이다. 다만 선군정치를 지속하되 군부의 지나친 권력 비대를 막기 위해 당에 의한 군통제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 10주년이 되는 2007년에 제7차 당대회 개최 및 후계자 가시화를 위해 사회 전반의 안정 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간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나가려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강화되든지 아니면 그 반대이든지 북한은 남한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의 평화번영 정책도 남북 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남한의 대북 지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중반 이후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경우, 또는 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2006년 주변 정세가 순탄치 않을 것을 전제로 보다 세부적이고 치밀한 안정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진의 파악이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가 펼쳐져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각종 회담 시 위폐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진솔한 접근만이 체제 유지의 근간임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계는 북중 관계의 급속한 접근에 대비하여 경협이 확대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정상회담 등을 조기에 가시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2006년도 한반도 정세 및 남북 관계 전망

1. 한반도 주변 정세 전망

- (개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로 인해 주변 4국의 각축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한국의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에 의해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양 세력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인 바, 2006년에도 양대 세력의 對한반도 영향력 제고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로 인해 한반도는 어느 일방적인 점유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북측은 대륙 세력권에, 한반도 남측은 해양 세력권에 편입되어 분단 상태가 지속
-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 경쟁은 남북한의 전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을 곤경에 빠뜨려 왔는 바, 주변 4국의 한반도 '분단 현상 유지' 정책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중국과 일본의 아시아 패권 전략, 러시아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혼재
  - 어느 국가도 한반도 내에서의 유일 패권 장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압 정책을 반대함은 물론 북한의 조기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군사 등 다방면에서 대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전향적인 대외 정책을 표방할 것으로 추측
  - 북한은 '중국식 시장사회주의' 도입 가능성이 높음

\* 2005년 10월 28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북 시, 중국은 대규모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고,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음

○ (미국 정세 전망) 부시 행정부는 각종 악재로 인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세계적 차원의 유일 패권 지위 유지를 위해 중국 봉쇄 전략을 채택하고, 동북아에서는 미일동맹을 최우선적 정책 과제로 설정함과 함께 한미 동맹을 차선의 선택으로 상정
- 부시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높지 않아 중간선거(11. 7)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부시 행정부는 대북 온건·실용주의적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함
  - 이라크 사태의 지지 부진, 허리케인 카트리나 늑장 대처, 리크게이트, 아브라모프 로비사건 등 부시 대통령 및 공화당에 대한 다수의 악재로 인해 중간선거 승리는 불투명함
- 이라크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이 등장하기 어려운 반면, 북한의 '획기적인' 양보가 없는 한 대북 온건책이 등장하기도 곤란함
  - 6자회담과 관련하여 미국은 이라크 사태를 교훈삼아 '다자적 일방주의(Multilateral Unilateralism)'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실험을 통해 핵위기를 고조시킬 경우 미국의 대북 무력시위 등 강경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존재

-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6자회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또는 미국내 강경파 무마를 위해 한국 및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수단은 북한 인권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
  - 위폐 제작 및 돈세탁을 이유로 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인권 문제와 대북 식량지원 연계
  - \* 미국 북한 인권 특사 레프코비츠는 북한 인권과 식량 원조와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였음
  
- (일본 정세 전망) 일본은 역사왜곡·신사참배 를 지속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갈등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북핵 문제나 남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 경향과 더불어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남북자 단체 활동 등으로 인해 일본의 대북 정책은 금년 9월에 고이즈미 총리가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할 경우 강경화될 전망
    - 6자회담이 장기화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강화 등 대북 경제제재 확대
    - 북한 인권 문제 전담 대사직 신설 등
  
  - 일본은 보통국가화 및 일본민족주의 회복을 통한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해 역사왜곡 및 신사참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 및 중국과의 마찰은 200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대중 봉쇄전략 달성을 위해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바, 2006년 9월 고이즈미 총리 퇴임 이전 1회 정도의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2006년도 북·일간 교역 위축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세 전망) 중국은 '화평발전 전략'에 입각, 6자회담 중재 및 대북 지원을 지속하는 반면, 일본 및 미국의 중국봉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중화주의' 달성을 위한 변방안정화 전략에 의해 북한, 러시아, 베트남, 몽고, 인도 등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
  - 2006년에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경제 회복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됨
  - 6자회담 교착 시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양보를 종용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전망
-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천명하고 평화로운 발전전략(和平發展戰略)을 세운 중국은 변방 중시 정책상 대북 경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으나, 미국과 일본의 대북 식량 지원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북 경제 협력을 대폭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 2005년 10월 28일 후진타오 주석 방북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음

< 북한의 對中 교역 실적 >

(단위: 백만 달러)

2004. 1~11월			2005. 1~11월			증가율(%)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총액	수출	수입
1,176	532	644	1,458	462	996	24.0	△13.0	5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북·중 교역 통계」

## 2. 북한 정세 전망

- (개관) 전체적으로 2005년의 안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군정치  
를 통해 김정일 권력은 안정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 개방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북한 정세는 2005년의 안정 기조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  
이지만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북한은 대외면에서 '9·19 북핵 공동성명'을, 대내면에서 '배  
급제 확대'를, 대남면에서 '6·17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전반적인  
체제 안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북한은 200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2005년을 "거창한 창조와 변  
혁의 해"로 평가
    - \*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005년의 남북 관계를 높이 평가  
하면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주장 (2006. 1. 6)
  - 사회 전반에 걸친 선군정치화로 인해 김정일 정권의 권력 누수 현  
상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북미간 갈등 관계로 인해 획기적  
인 대외 개방이나 남북 관계 개선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북한의 대외 개방 전제 조건은 베트남 및 중국처럼 대미 관계 개선  
을 통한 안전 보장 획득일 것인데,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인권·위폐  
문제 등으로 인해 북미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자본주의 사상 유입 방지를 위한 사회 통제, 군기 이완 방지를 위  
한 군 사상 교육 강화,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응한 반미주의 교  
육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은 혁명 3, 4세들에 대한 주체사상 교양,  
선군사상 교양, 혁명적 수령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반복 강조

-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응한 민족공조 강조가 한층 심화될 것 인바, 낮은 단계 연방제 실천 촉구 등 '근본 문제'에 대한 강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의 3대애국 운동”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민족공조 하의 “거족적인 미군 철수투쟁”을 선동
  - '민족대단합'은 “통일운동단체들사이의 연대·연합”으로서 남한의 '신보수'에 맞서는 “반보수 대연합” 결성을 의미
  
- (분야별 전망) 선군정치 강조, 김정일 권력 안정화 및 후계자 선정 준비, 경제의 점진적 회복, 사회 통제 강화, 대외 개방 확대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정치) 김정일 위원장의 당·정·군에 대한 지배권 장악은 확고부동한 바, 권력 엘리트내 반김정일 투쟁은 물론 민중의 조직적 항거도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연사를 제외한 반김정일 세력에 의한 김 위원장의 위상 변경 가능성은 희박
  
- 안보 문제가 주요 국가 아젠다로 남아있는 한 비정상체제인 '선군정치' 지속은 불가피할 것이고, 김정일은 선군정치 과시를 위해 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05년도 김정일의 분야별 현지도 현황 >

(2005. 12. 31 현재)

분야	군관련	경제	대외	기타	계
횟수	70	19	29	13	131

주 : 2004년도 공개 활동은 총 92회이며, 분야별로는 군관련 60회, 경제 10회, 대외 14회, 기타 8회 등

- (군사) 부정부패로 인한 하위 당조직 부패 및 붕괴가 지속되는 한 군부 역할의 지속적인 증대 불가피할 것이나, 군의 권력과다를 견제하기 위한 당의 군 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한군은 군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대외, 대남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한 영향력 행사
  - 당 조직지도부 및 군총정치국에 의한 군부 통제
  
- (후계자) 김정일의 '후계 논의 중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후계자 문제는 2006년부터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2006년 신년공동사설은 '3, 4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김정일 후계자 조성 작업은 2006년 준비 단계를 거쳐 제7차 당대회 개최가 유력시되는 2007년쯤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김정일 정권의 관심사인 수령주의 유지, 미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획득, 경제난 해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김일성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군사 분야 경험, 경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갖춘 군부 출신일 가능성이 높음
  - 후계 방법에는 세습, 전문관료 승계, 군부 등장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함
  - 세습일 경우 2남인 김정철이 유력시되고 있으나 '여성 호르몬 과다증'으로 인해 후계자로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음
  
- (경제) 2005년 식량사정 호전으로 인해 일부 배급량 및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2006년에도 이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세계식량계획(WFP) 등 평양 주재 대북 긴급 지원 NGO 철수 요구는 북한 식량난 호전의 증거
  -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2005년에 제정된 '북남 경제협력법'(7. 6)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대외 및 대남) 인권 및 위폐 문제를 앞세운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주민 결속을, 외부적으로는 북·중·러 '3각동맹'을, 대남적으로는 '민족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

- 신년 공동사설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김정일의 중국 방문(1. 10~18)도 위폐 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 북한은 1월 6일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필두로 공세적인 남북공조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
- \* 「통일신보」(1. 1)는 남북 관계를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해 남북간 접촉과 대화, 광범위한 통일행사 개최, 협력과 교류사업 적극 추진 등을 강조

### 3. 남북 관계 전망

- (남북 관계 결정 요인) 북핵 문제, 북중 관계, 내부 정치 안정화, 남한의 대북 정책, 북한 정치 일정 등이 남북 관계의 주요 결정 요인임
- ① 6자회담의 향배 : 북핵 문제는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변수인데 인권 및 마약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전도가 불투명
  - 미국은 '선택폐기'를, 북한은 '선경수로 지원' 및 대북 압박 정책 중지를 주장함으로써 점점 도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인바,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지속되는 한 '핵게임'을 지속할 전망
  -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북한의 대미 보복 정책으로 인해 6자회담의 금년초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② 북·중 우호 관계 : 중국은 국경 안정 전략에 입각하여, 전통적으로 북한을 중시하여 왔기 때문에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해 식량 및 원유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희석시킴으로써 남한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김정일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고, 북한내 생필품의 약 90%가 중국산이며, 탄광을 비롯한 각종 광물자원 채굴권이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

- ③ 북일 수교 협상 : 북한의 대일 수교 협상 목적은 100억 달러 상당의 배상금 확보를 통해 경제난 해결의 단초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일본은 북일 수교를 통해 중국 견제 및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북일 수교가 급진전될 경우 북한의 남북 협력 욕구는 약화될 것이고, 대남 의존도 또한 저하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일본인 납치 문제, 일본의 대북 강경책 등으로 인해 북일 수교가 단기간 내에 성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2006년도에 북일 수교 문제로 인해 남북 관계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 회담(2005. 11. 3~4)이 개최되었으나 양국간 입장 차이로 인해 별무성과로 귀결
  - 북일 수교 문제와 관련 2006년 내에 고이즈미 총리 또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방북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내 부정적 여론, 미국의 대일 견제, 북한의 과도한 요구 조건 등으로 인해 북일 수교까지 달성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
- ④ 북한의 대남 정책 : 북한의 대남 정책 목표는 '조선반도의 사회주의화'임은 분명하지만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 획득 필요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각종 회담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
  - 북한 경제난은 대남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북한의 대남 전략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림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 등 '골수 보수파들'의 오판에 의한 대남 공세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점진적 발전 가능성 존재
- ⑤ 남한내 여론 : 2006년 남북 관계와 관련한 남한내 여론 및 정치적 지형은 북한의 대남 정책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바, 남한내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은 매우 열악한 상황
  - 국회운영위원회 발표(2005. 12. 6)에 의하면 대북 지원 축소가 65.2%에 달하였고, 통일비용 부담 불가도 40.8%였으며, 「민주평통」의 여론조사(2005. 12. 20)에 의하면 국민의 54.2%만 '대북 지원=평화 비용'이라고 인식

- ⑥ 북한의 정치 일정 : 북한이 2006년 혹은 2007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후계자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가시화시키려 할 경우 남한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한바,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의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존재함
  -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당대회는 5년마다 개최토록 되어있으나 북한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았음
  - 2007년은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김일성의 95회 생일·김정일65회 생일로서 북한으로서는 의미있는 해
- (2006년 정세 개황) 2006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 접점을 찾아 당국간·비당국간 관계 모두 발전할 것으로 기대
  - 2006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는 역시 북핵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 핵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북미간 깊은 불신, 북미의 상대에 대한 '악마화' 필요성 등으로 인해 북핵 문제의 조기 타결 가능성은 낮음
  - 북핵 문제로 인한 '저강도'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 관계가 밀착됨으로써 북한의 입지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주의·주장 강도가 커질 것이나 남한의 대북 지원 필요성에 의해 실질적 대화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
    - 2005년 10월 28일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금년초의 김정일 방중 (1.10~18)으로 북중 관계는 더욱 공고화 되고 있음
  - 다른 한편 북한은 '6·15시대' 완성을 위한 '통일 선군시대' 개막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2006년에는 '근본 문제'인 낮은 단계 연방제 관철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의 대북 포용 정책으로 인해 남북 관계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
    - 근본 문제는 연방제 실현,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 우리의 평화·번영 정책의 북한 분야는 기본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임

-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 (남북 당국간 대화) 당국간 회담은 북한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최소한 2005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변 상황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북한은 남북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보이는바, 당국간 대화는 2005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이 당국간 회담에 참여하는 주요인은 식량 등 경제 지원 획득, 남한내 친북 여론 조성, 통일 주도권 확보, 미국의 대북 압박 회피 등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북 당국간 회담은 지속할 것으로 판단
    - 남한의 회담 참여 목적은 한반도 평화 유지 및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
  - 다만 회담 의제 고갈로 인해 북한이 장관급회담 개최 기간을 길게 잡으려 할 것이고, 일단 회담이 개최되면 '근본 문제들' 즉, 연방제 관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당국간 대화시 많은 난관이 우려됨
    - 북송 장기수들의 보상 요구처럼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요구를 지속 가능성도 존재함
- (남북 경협)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북한의 부분적 개방을 통한 경제난 해결 전략으로 인해 남한의 대북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 확대에 의해 남북 경협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은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정치·사회적 대남 의존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 경협을 일시에 중단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삼성」을 비롯한 남한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2005년 7월에 제정된 '북남 경제협력법'을 앞세워 투자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은 금강산 관광 확대는 물론, 백두산·칠보산·개성 관광을 실시할 것이고,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남한의 조응으로 인해 북한 관광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
  - 다만, 북미 관계가 무력 시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관광 사업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 (사회 문화 교류 협력)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논리와 남한의 전향적 대북 인식 및 정책이 맞물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사회 문화 교류 협력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남 통일전선전술 대상 분야로서 북한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약하므로 2006년에도 6·15 공동선언 및 8·15 광복절 기념일을 전후해서 남북간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 '통일 선군정치'론에 대한 선전 선동 강화
  -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은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히 기념할 것을 제의
- 북한은 비정부간 교류 협력을 통해 남한내 진보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NGO의 대북 경제 지원을 획득해오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제 비정부 기구와는 달리 남한 NGO의 대북 지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각종 NGO의 무차별적 대북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주요 창구를 재조정하려 할 것으로 판단
  - 통일연대 등 남한 진보단체들의 ‘동맹보다는 민족 우선’ 논리에 의해 남북간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당국간 회담은 물론 경협 및 사회 문화 교류 지속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에는 물론, 남한 내에서의 남남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
-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은 ‘반보수 대연합’을 주장했는 바, 미국의 압박 정책이 강화될 경우 주한 미군 철수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미국의 대북 압박 철회 등을 주제로 ‘민족공조’를 강조할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남한에서는 극심한 이념 논쟁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
- (김정일 답방)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남한 내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의 신변 안전 보장, 대폭적인 대북 경제 지원, ‘反김정일 데모’ 원천 봉쇄 등이 확실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북핵 문제 타결에 따른 북미간 관계 개선이 달성되어야 가능하고, 대북 경제 지원은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반김정일 데모 원천 봉쇄는 시민사회 및 보수 언론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미국의 북핵 및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통한 ‘남북 관계 속도 조절’ 요구, 북한의 과도한 경제 지원 요구, 남한내 ‘반김정일 정서’ 및 대북 지원의 부정적 입장 등으로 인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이 곤란한 상황

- 따라서 남한 내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 방북 이후 북핵 문제의 전격적인 타결, 7차 당대회 준비 필요성, 김정일 방중(1. 10) 이후 중국의 적극적 권유 등으로 인해 북한이 '극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존재

#### 4. 시사점과 정책 과제

- 북한의 핵·위폐 문제에서 연유된 한반도의 긴장은 중국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고 있으므로, 지난해 후진타오의 방북 및 최근 김정일의 방중을 통해 북중 관계가 급속히 심화되는 형국임
  - 중국의 대북 지원과 북한의 중국 인정이 접점을 찾음
- 북중 관계 심화로 인한 우리의 한반도에서의 위상 약화 방지를 위해 남북 경협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추진 필요성이 대두
  - 한미 동맹과 남북 협력의 병행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정상회담 시기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는 시점이 되어야 하고, 미국과는 사전 조율을, 국민들에게는 투명한 절차를 보여주어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

전현준 현대경제연구원 자문위원(☎901-2585)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hjchon@kinu.or.kr)

< 남북 경험 추이 >

		단위	2003	2004	2005. 12	2005
상업적 거래	남북 교역	만 달러	40,868	34,780	3,527	41,951
	- 일반 교역	(%)	(19.2)	(-14.9)	(11.3)	(20.7)
	- 위탁가공교역		22,367	17,179	2,099	20,978
	경제협력사업	만 달러	18,501	17,601	1,428	20,973
	- 개성공단	(%)	2,103	8,867	2,391	27,003
- 금강산관광		(-15.8)	(321.6)	(71.6)	(202.6)	
소 계	만 달러	0	4,116	1,923	17,674	
	(%)	1,602	4,177	468	8,707	
	만 달러	42,971	43,647	5,918	68,954	
	(%)	(16.8)	(1.6)	(29.7)	(57.9)	
비상업적	대북 지원	만 달러	27,065	25,840	1,788	36,504
	기 타	(%)	(27.0)	(-4.5)	(-42.0)	(41.2)
			2,377	215	7	117
소 계	만 달러	29,442	26,055	1,795	36,621	
	(%)	(7.5)	(-11.5)	(-41.8)	(51.6)	
총 계	만 달러	72,413	69,701	7,713	105,575	
	(%)	(12.8)	(-3.7)	(0.8)	(51.4)	

주 :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 >

		단위	2000	2004		비교
			북한	북한(A)	남한(B)	B/A(배)
인 구		천 명	22,175	22,709	48,082	2.1
경제성장률		%	1.3	2.2	4.6	-
명목 GNI		억 달러	168	208	6,810	32.8
1인당 GNI		달러	757	914	14,162	15.5
무역	무역 총액		19.7	28.6	4,783.0	167.2
	- 수출	억 달러	5.6	10.2	2,538.4	248.9
	- 수입		14.1	18.4	2,244.6	122.0
에너지	발전용량	만 kW	755	777	5,996	7.7
	발전량	억 kWh	194	206	3,421	16.6
	원유도입량	만 배럴	285	390	82,579	211.7
생산량	쌀	만 톤	142.4	180.0	500.0	2.8
	철광석	만 톤	379.3	457.9	22.6	0.05
	자동차	만 대	0.7	0.45	346.9	770.9
	비료	만 톤	53.9	43.4	361.4	8.3
S O C	철도 총연장	km	5,214	5,235	3,380	0.6
	도로 총연장	km	23,633	25,185	100,278	4.0
	항만 하역	만 톤	3,550	3,690	53,278	14.4